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및 김정은 시정연설 평가

한기범

객원선임연구위원

서보배

연구원

2026-04-13

북한은 2026년 3월 15일 7년 만에 제15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선거해 임기 5년인 687명의 대의원들을 선출했고, 3월 22~23일에는 그 첫 회의를 소집했다. 북한은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선거에 대하여 ▲국가지도기관 및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 선거에 대하여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 ▲노동당 9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 ▲2025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202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등의 의제를 토의했고 이후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했다. 또한, 국가기관 선거를 통해 김정은이 다시 국무위원장에 추대되었고 내각이 새로 구성되었다. 헌법개정에서는 예상되었던 ‘영토 조항’ 규정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사회주의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 표현만 삭제했다. 내각 총리의 ‘5개년 계획 수행 방안’ 보고에서는 9차 당대회 때 밝히지 않은 지난 ‘5개년 경제계획 성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2026년 국가예산 계획은 수입을 0.5%, 지출을 5.8% 늘리며 큰 폭으로 확대해, 국방 및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1차 연도 과업 수행을 고려했다.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지난 7년 '성과'로 '자력갱생 노선 정착 및 핵보유국 지위 확보' 두 가지만을 간략히 거론했다. 이는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정권기관의 과제로,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자주·자립·자위', '사상선행'을 국가활동의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새 경찰 제도 추진·도덕기강 확립 문제를, 경제 분야에서는 "힘을 넣어야 할 과업"으로 "긴장한 전력·석탄 증산", "초미의 과제인 식량 문제 해결"을, 군사 분야에서는 "복잡한 국제정세"를 거론하면서 "인적·물적 자원 최우선 보장으로 방위력 강화"를 주장했다. 대외관계로는 당대회 때보다 '반미 적대' 의지를 선명히 했고, 한국에 대해선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면서 "대적투쟁" 의지를 드러내 내부 긴장 의식을 확대 재생산했다.

이번 북한의 15기 최고인민회의 출범의 특징을 살펴보면 권력구조 면에서는 김정은 친정체제를 강화했고, 정책 방향 면에서는 경제 활성화보다 국방력과 '대적투쟁' 외교 강화를 예고했다. 또한 체제 관리 방식 면에서는 개혁개방 기조에서 더욱 후퇴해 사상우선·통제강화와 함께 자립노선 고수로 체제의 경직성은 여전할 것임을 시사했다.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3.15) 결과

북한은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2019년 3월 10일에 실시했다. 그러므로 원래대로라면(임기 5년) 15기 대의원 선거는 2024년에 해야 하는데 2년 늦게 지난 3월 15일 실시했다. 북한 헌법은 "불가피한 사유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지연되면 대의원 임기는 연장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북한은 선거가 지연된 '불가피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소집 주기를 맞춰 최고인민회의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도 15기 1차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3.23)에서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당중앙지도기관과 국가지도기관이 동일한 주기와 임기, 명백한 책임을 가지고 국가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을 견인해나가는 국면이 성립되었다"¹고 하여, 당정에 동시에 정책 책임을 부과하려는 의도임이 확인되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2026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를 공고하고, 각 선거구에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들과 주민들과의 '상봉모임'을 진행한 후에 '선거자 회의'에서 단일

후보를 결정하여 내세웠으며, 이어 이들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다.² 북한은 2023년 8월에 개정된 대의원 선거법에서 일부 선거구에서 복수 후보자를 내세울 수 있도록 해 개선된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선전했다. 북한은 대의원 선거(3.15) 결과 "선거자의 99.99%가 투표에 참가"했고 "찬성 투표한 선거자는 99.93%, 반대 투표한 선거자는 0.07%"였다고 했다. 북한은 2023년 11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부터 일부 '반대표'가 나왔다고 밝혀 명목상 주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양 선전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구성비도 밝히며 각계각층을 골고루 대표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었다고 선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고길선)은 이번 회의 개회사에서 대의원 687명의 구성을 "공업 부문 201명, 농업 부문 100명, 국토·산림·도시경영·봉사 부문 15명, 과학·정보산업·교육·보건·문학예술·출판보도·체육·혁명사적 부문 70명, 정권기관 170명, 사회단체 10명, 우당과 종교단체 6명, 당기관 53명, 무력기관 6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여성은 108명"이라고 밝혔다.³

북한은 새로 선출된 687명의 대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그 명단에 김정은은 물론 제외되었다.⁴ 직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도 제외된 반면, 14기 대의원이 아니었던 조용원이 새롭게 이름을 올리며 그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될 것임을 예고했다.⁵ 이번 15기 대의원은 14기 명단과 비교하면 70% 이상의 교체율(약 520명 교체)을 보였다.⁶ 지난 9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250명 중 55.6%인 139명을 교체한 것과 함께 북한 간부 사회에 큰 폭의 인사 교체가 이뤄진 셈이다.

결국 북한은 이번 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당대회 소집 주기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체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선거구에서 복수 후보자를 내세우거나 대의원 구성비에서 각계각층 대표성을 제고해 '민주주의' 방식으로 개선되는 양 선전했고, 14기 대비 70% 이상의 대의원을 교체해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중간 간부층의 쇄신을 도모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 기능을 수행하고, 결국은 당이 정한 단일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로 이뤄지는 비(非)민주적 선거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3.22~23) 결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후 일주일 만에 서둘러 1차 회의(3.22~23)를 소집했다. 당지도부에 이어 정권기관 지도부도 조속히 새로 출범시켜 체제 쇄신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1일차 회의(3.22)에서는 '국가지도기구' 구성이 진행되었다. 국무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총리 선거와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한 내각 성원 임명이 있었다. 2일차 회의(3.23)에서는 북한 헌법 수정에 이어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문제'와 '국가예산 문제'를 토의했고, 이어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했고, 최고인민회의의 의장 조용원의 폐회사로 회의는 종료됐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평양의사당(만수대의사당)을 개칭 추정)에서는 김정은이 신임 내각 성원들⁷,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귀국한 해외 대사들, 그리고 15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을 축하 및 격려하고 기념촬영을 했으며, 저녁에는 김정은의 '국가수반 재추대'를 축하하는 예술공연이 진행되었다.

1. 새 '국가지도기구' 구성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가장 큰 중대사가 국무위원장 추대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리일환 당비서의 '제의'로 김정은을 다시 국무위원장에 추대했다. 국무위원회 구성은 제1부위원장에 조용원(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부위원장에 박태성(내각 총리)을 선거하였고, 11명의 국무위원에 김재룡(당비서), 리히용(당비서), 정경택(당비서), 김성남(당비서), 주창일(당비서), 최선희(외무상), 노광철(국방상), 김덕훈(내각 제1부총리), 리창대(국가정보국장), 방두섭(사회안전상), 김철원(최고검찰소장)을 선거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이며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영도자'이다. 북한은 2016년 6월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김정은의 국가 수반 직책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국무위원장'으로 변경했고, 2019년 4월에 이어 이번에도 그를 국무위원장에 재추대했다. 리일환 당비서는 김정은을 국무위원장 추대에 '제의'하면서 "국가수반 선거 결과에 새 단계 사회주의 건설의 성공 여부는 물론 국가와 인민의 장래가 좌우된다"거나 "국가수반이 위대해야 나라가 위대하다"면서 "김정은의 위대함이야말로 조선의 제1국력"이라고 했다. 또한 선대와의 계승성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김정은 찬양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전에 국무위원이었던 조용원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조용원이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유지하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직해 김정은의 '실세'임을 재확인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당 조직비서를 내놓은 상황에서 얼마나 '실세'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직책은 과거 최룡해 경우처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겸직하는 자리로 보인다. 국무위원회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조용원의 영향력도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과거 최룡해처럼 권력 핵심부를 떠나 '조용히' 있겠다는 것이 조용원의 희망 사항일 것이다.

이번 국무위원 구성의 특징은 김재룡·리히용 등 당비서 6명이 포진한 점이다. 지난 9차 당대회에서 당 지도부 구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당 비서국을 확대하면서 당비서들에게 당 정치국 위원자리를 겸직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의 연계성을 높인 점이었다. 이번에 다시 당비서들을 대거 국무위원회에 포진했다는 점에서 국무위원의 기능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나, 그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정책의 침투력은 당의 지시로 하달될 때 높기 때문에 구태여 국무위원회 모자를 쓰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당대회에서 당 총무부장을 맡은 김여정을 국무위원에서 제외시켜 당 살림살이에 전념하도록 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국무위원장에 유임된 리창대 전 국가보위상의 직책을 '국가정보국장'으로 표기해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편했다는 것인데, 이는 체제 통제와 함께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에 조용원, 부위원장에 김형식·리선권, 서기장에 고길선, 위원에 박광웅 등 13명을 선거하였다. 최고검찰소 소장에 김철원, 최고재판소 소장에 최근영을 선거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는 위원장 리히용, 부위원장 방두섭과 7명의 위원을 선거했고,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는 위원장 안금철, 부위원장 박정근과 7명의 위원을 선거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는 위원장 김성남, 부위원장 김덕훈과 7명의 위원을 선거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최룡해 대신 조용원이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은 당 법무부장을 맡았던 김형식과 당 통일전선부(→당 10국) 부장 등 대남 업무를 관장했던 리선권이 뽑혔다. 최룡해는 물러나면서 "당의 크나큰 신임에 더 높은 사업 성과로 보답하지 못한 아쉬움을 피력"했고, 조용원은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멸사복무할 것을 결의"했다.⁸ 당에서 잔뼈가 굵은 조용원은 최룡해보다 더 즉각적으로 '당의 의도'를 집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각 총리로 박태성을 다시 뽑아 유임시키면서 내각 총리의 제의로 내각 부총리 7명과 27명의 위원장·상(相) 및 상급(장관급)을 임명했다(그림 1) 참고). 신설된 제1부총리에 김덕훈,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정근, 부총리 전현철·박훈·리경일·김창석·전승국,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리철만 등 7명을 임명했다. 이번 내각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제1부총리'직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김덕훈을 앉힌 것이다. 김덕훈은 박태성 이전 내각 총리였으며, 직전 당 경제비서에서 '내각 제1부총리(국무위원 겸직)'로 자리를 옮겼다. 김정은에게 여러 차례 비판을 받고 숙청 가능성도 예견되었으나 당 정치국 위원직을 유지한 채 '무임소(無任所)' 경제부총리를 맡아 여전히 경제관리의 '내각책임제·중심제' 강화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가격위원회, 국가검열위원회, 평양건설위원회 등 내각 내 협의체 집행조직인 '위원회'가 상당수 폐지된 점이다. 내각 내에 국가계획위원회, 농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만 존치되었다. 국가가격위원회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실패했고, 국가검열위원회는 당중앙검사위원회나 당규율조사부와 기능 중복을 야기했으며, 평양건설위원회는 지방발전정책에 따른 지방건설사업 확장과 상충되는 조직이다.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격위원회를 과거처럼 '가격국'으로 축소해 국가계획위원회 한 부서로 편입시킬지, 향후 조직 정비 방향이 주목된다.

[그림 1]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정권기관 구성(3.23 노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국가지도기관을 선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선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제1부위원장	조용원			
부위원장	박래성			
위원	김재룡	리이홍	정경택	김성남
	주창일	최선희	노광철	김덕훈
	리창대	방두섭	김철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선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용원			
부위원장	김형식			
부위원장	리선권			
서기장	고길선			
위원	박광웅	리경철	박진명	리영식
	서광웅	문철	리원중	한종혁
	전항순	리명철	리혁철	강명철
	강지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는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하고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검찰소 소장	김철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소장	최근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는 내각 성원들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래성			
제1부총리	김덕훈	제2경제위원회 선박공업상	김광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정근	정보산업상	주용일	
부총리	전현철	건설건설공업상	서종진	
부총리	박훈	국가건설감독상	양기성	
부총리	리경일	경공업상	리홍근	
부총리	김창석	지방공업상	김철범	
부총리	전승국	수산업상	윤성철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리철만	제조업상	리명국	
의무상	최선희	로동상	진금송	
사회안전상	방두섭	대외경제상	윤정호	
내각사무장	김금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성빈	
금속공업상	김광남	국가과학원 원장	김승진	
화학공업상	김선명	국토환경보호상	양영진	
전력공업상	김유일	도시경영상	김선일	
석탄공업상	리영철	재해방지상	김철남	
철도상	김하규	방곡관리상	김광진	
특혜운상	조정룡	산업상	김영식	
채취공업상	리상도	교육상	리영철	
자원개발상	권성환	보건상	김두원	
림업상	한영호	문화상	현은철	
기계공업상	리광남	체육상	김일국	
원자력공업상	왕창욱	중앙은행 총재	백민광	
		중앙통계국장	리철산	

한편 북한은 이번에 내각 개편을 발표하면서 선박공업성 책임자를 '제2경제위원회 선박공업상'으로 표기했다. 이는 내각 선박공업성을 군수생산을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회의 통제하에 두어 김정은 지시대로 균함·잠수함 건조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국방성·국가안전성과 함께 국무위원회 산하 기구로 편제되었던 사회안전성은 이번에 다시 내각 산하로 환원해 내각 총리의 사회통제 기능을 돕도록 했다. 또한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경찰 제도를 연구·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해 체제 통제 강화를 위한 경찰 제도의 변화도 주목된다.

2. 북한 '헌법' 명칭 개정

북한은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 명칭' 변경 사실만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용원이 헌법 수정안을 제의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개칭하는 것을 비롯하여 수정보충된 법 초안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설하였다"고 하며 복수의 헌법개정을 한 듯이 보도했다.

헌법에 '사회주의' 표현을 삭제한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북한 체제의 '탈(脫)이념성' 추구보다는 이념을 초월한 북한 헌법의 '우월성' 선전 의도로 잠정 평가된다. 김정은은 집권 초반에는 강조하지 않던 '사회주의' 이념이나 사상을 2018년 시진핑 주석과 수차례 정상회담을 한 무렵부터 강조하기 시작해 그의 통치에 이념적 색조가 짙어졌다. 따라서 이념 문제보다는 '핵무력 고도화'를 명시⁹한 북한 헌법의 전 세계적 '우월성' 과시 차원으로 여겨진다.

북한이 법률이 아닌 헌법을 개정하고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점에서 관심사였던 '민족·통일 배제 개헌'은 이번에 실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번 헌법에 '영토 조항'을 추가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김정은이 지난 당대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역사적인 중지부를 찍는다.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 판단을 내렸다"¹⁰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행동과 모순된다.

3. 3 차 5 개년 계획 수행 및 예·결산 문제

다섯 번째 의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데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내각 총리 박태성이 이를 관철하기 위한 '내각의 사업계획과 실행방도'를 보고하였고, 내각 간부 10명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내각 총리는 "지난 5년은 사회주의 건설이 전면적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 전진이 이룩된 위대한 전환의 연대"였으며 주요 부문에서 새로운 물질 기술적 토대가 구축되고 농업생산력이 한층 개선되는 성과들이 마련되었다면서 지난 '5개년 경제계획 성과'를 나열했다([별첨 1] 참고).

내각 총리는 세간의 '경제실적 부진' 거론을 반박이라도 하듯이 "주요 공업 부문에서 2020년 대비 주철 3.2배, 질소비료 1.5배, 유색금속 1.9배, 시멘트 1.4배, 수산물 1.9배 장성했다"며 구체적인 성과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 증산 사례로 "2020년 대비 질소비료 생산 149% 증산", "8차 당대회 제시 전력생산 목표 106% 수행", "5년전 대비 시멘트 1.4배 증산", "2020년 대비 많은 알곡 중수", "천 생산 목표를 넘쳐 수행", "40여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 신설", "전국적으로 36만여 세대 살림집 및 인민생활 관련 2,100여 대상 개건·건설" 등 주요 지표의 실적도 밝혔다. 게다가 박정근 부총리(겸 국가계획위원장)는 최고인민회의 토론에서 "5개년

계획이 기본적으로 완수되어 국내총생산액을 1.58배 장성시켰다”고 거들었다.¹¹

내각 총리는 이번에 몇몇 지표의 목표 달성률을 밝혔으나 2023년·2024년 말에 밝힌 ‘12개 중요고지 점령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몇 가지 품목의 달성률도 북한경제가 거의 반토막 난 2020년 상황과 비교해 유리한 부문 중심으로 성과를 내세우는 방식이었다. 금속(주체철 3.2배)공업과 질소비료 생산을 중심으로 한 화학공업, 시멘트와 수산물 생산에서는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석탄의 목표 달성율은 거론하지 않았고, 식량생산도 “2020년 대비 많은 알곡 증수”로 표현했다. 결국 부문별 생산 실적 편차가 크고, 2020년 대비 생산활동이 개선되었으나, 제재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지는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각 부문별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별첨 2] 참고), 그중 특징적인 내용만을 소개하면 금속공업 부문에서 주체철 생산토대는 완성한 반면 화학 부문의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 공사는 부진함을 드러냈고, 전력과 석탄 부문에는 공히 노력·자재·설비 보장 대책을 거론해 전력·석탄 부문의 생산 역시 부진함을 시사했다.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사에 총력 집중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생산된 알곡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모든 양곡 소비단위들에서 규정대로 양곡 소비정형을 총화하는 체계를 세워나가겠다”고 하여 식량 문제에 대한 농업위원회(식량증산)와 양곡관리성(식량통제)의 상이한 입장이 드러났다. 지방공업공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원료기지 조성, 기능공 양성으로 생산을 정상화하고 질 높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지방발전정책에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내각 총리의 새 전망계획 수행방안에서도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거론된 정책 방향과 마찬가지로 부문별 달성 목표 제시가 없는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 다만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앞으로 5년 내 공업 부문 1.5배 장성”을 거론했을 뿐이다. 또 부문별로 구체적인 투자계획이나 프로젝트 제시 없이 “생산 토대 활성화”, “개건 현대화” 등 당위적인 목표만을 내세우고 있다([별첨 2] 참고).

한편 국가예산 보고(재정상 추정)에서는 2025년 예산수입계획은 105.1% 집행되어 전년대비 107.2% 성장했고, 예산지출은 2024년 대비 103.7%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출했으며, 그중 “국방 부문에 국가예산 지출 총액의 15.7%에 해당하는 자금을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보장했다”라고 밝혔다. 2026년 국가예산 수입은 지난해보다 100.5% 증대될 것으로, 국가예산 지출은 지난해보다 105.8% 늘어날 것이며 그중 국방비로 15.8% 지출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언급했다.¹² 북한은 2026년 국가예산 계획에서 수입과 지출을 각각 0.5%, 5.8%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특히 지출은 지난 5년의 1.1~3.8% 수준으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주요 부문의

인민경제사업비도 6.3% 증가하는 등 2026년 예산은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1차 연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평가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3월 23일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긴 연설(10pt, 18쪽)을 했다. 김정은은 자신을 다시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중책을 맡겨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헌법을 수호하며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도모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선서”했다. 이어 7년의 최고인민회의의 14기 국가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15기 기간의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당대회 ‘총화’ 보고와는 달리 지난 7년의 ‘성과’로 ‘자력갱생 노선 정착 및 핵보유국 지위 확보’ 두 가지만을 간략히 거론하고 정권기관의 과제 제시에 비중을 두었다. 정권기관의 분야별 과제 제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정치·사회 분야 과제로 ‘자주·자립·자위’ 등 국가활동의 원칙, 동·인민반 사업 개선, 새 경찰 제도 추진 문제, 도덕기강 확립 문제 등을 거론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특히 “힘을 넣어야 할 과업”으로 기간 공업의 전면적 현대화, “긴장한” 전력·석탄의 증산, “초미의 과제인 식량 문제 해결”, 탄광지구 살림집 건설 등을 주장했다. 군사 분야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의식한 듯 “복잡한 국제정세”를 설명하며 군사 분야에 “인적·물적 자원 최우선 보장으로 국가방위력 강화”를 주장했다. 대외관계로는 당대회 때보다 ‘반미 적대’ 의지와 함께 장기 대결전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선명해졌고,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적투쟁’을 강조하여 긴장분위기를 확대 재생산하여 ‘두 개 적대 국가론’을 정당화했다.

1. 2대 성과: ‘자력갱생 노선 정착 및 핵보유국 지위 확보’ 집중 거론

김정은은 지난 7년(2019~2025) 최고인민회의의 14기 성과로 “자력갱생 노선을 선택한 것과 핵보유국 지위를 고수한 정책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두 노선 견지로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과는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전취”했다고 했다. “가장 정확한 번영의 길은 자력갱생, 자생자활에 있다”거나 “적대세력들은 핵을 포기하는 그 무슨 대가를 설교하며 우리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했지만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실증해 주고 있다”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핵방패의 구축’으로 “우리는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위협을 줄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거나,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5개년 계획 기간에 그 이전 대비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가 2.4배로, 그중 핵심 부문에는 8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도 했다. 이는 핵미사일 개발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문에도 투자를 확대했다는 의미로, 당대회에서 리일환 당비서가 김정은을 당총비서로 추대하면서 '총알과 사탕, 둘 다 생산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2. 정치·사회 분야 과제: 정부활동의 원칙, 경찰 제도 등 개선 제시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향후 과업으로 먼저 국가활동의 원칙으로 '자주·자립·자위의 원칙',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념', '사상·기술·문화' 3대 혁명을 강조했다. 특히 '사상사업 선행의 원칙'을 주문했다. 그리고 당대회에서도 거론한 '새 시대의 5가지 요구'를 정권기관 간부들도 갖춰야 할 덕목으로 강조했다.

또 정권기관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으로 ▲동·인민반 사업 개선 문제 ▲국가수입을 늘려 국가의 정상운영과 인민적 시책을 재정적으로 담보하는 문제 ▲봉사 및 물자유통 공간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조절 통제력을 회복하는 사업 ▲인구 '장성'(성장)을 위한 사업 ▲ 경찰 제도를 내오는 문제 등을 거론했다. 특히 김정은은 "경찰 제도를 내오기 위한 연구와 준비사업이 수년간 진행되었다"면서 새로운 경찰 제도를 예고했다. 또한 교육토대 강화·보건혁명·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강조하며, 인공지능 및 우주기술 발전, 제2차 전반적 12년 의무교육 강령 집행, 보건 현대화 구상과 사회주의 생활 양식과 도덕 기강 확립 문제도 거론했다.

연설 내용과 함께 인사 개편 등 이번 최고인민회의 전반에서 취해진 정치·사회 분야 조치를 종합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통해 김정은의 독자적 권위가 제고되고, 우상화도 강화될 것임을 예고됐다. 국무위원회 구성 방식을 당비서 중심으로 바꿨으나 국무위원회의 역할 강화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내각에 제1부총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격위원회 등 몇몇 위원회 조직을 장관급 조직에서 폐지했다. 경제 관리의 총괄 지도 기능을 내각 지휘부로 높여 총리·부총리들의 집체적 협의로 '내각책임제·중심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군수 분야 우선 자원 할당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념적으로는 자력갱생이 강조되어 인민대중제일주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노력 동원이 강화될 것이며, 간부들에게도 3대 혁명을 강조하면서 '사상선행의 원칙'을 강조하여 체제 관리의 유연성·실용성은 더욱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관리 시스템에서도

동·인민반 제도와 경찰 제도를 개선해 주민통제 강화가 예상되고, 국가 재정수입 증대와 상업·봉사망의 국가주도 운영을 강조해 정권의 '착취'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경제 분야: 새 '5개년 경제계획' 과제 제시

김정은은 "경제발전 5개년 수행방도에 대해서는 당대회에서 제시되었으므로 반드시 주목하고 힘을 넣어야 할 과업들을 언급하겠다"면서 우선 기계제작 기지 등 기간공업 부문의 전면적인 기술 개건 현대화 사업과 금속·화학·전력·석탄 부문의 생산 잠재력 확대 문제를 거론했다. 기간공업 부문의 낡고 뒤떨어진 생산공정과 설비 현대화가 필요하고, 제일 긴장한 부문이 전력과 석탄이므로 이 부문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전반적 공업 부문 발전토대 강화와 동시에 생산 장성 투쟁으로 공업 부문 생산액을 1.5배 정도 증가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인민생활과 직결된 농업, 수산업, 경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새 전망계획 기간에 알곡생산 목표를 달성하여 초미의 과제인 식량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복·가방 등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 시책의 집행, 살림집 해결 문제, 관광문화지구 건설, 지방발전 정책, 무역활동 적극화를 거론했다. 살림집은 전국적으로 37만 세대를 건설하되 모든 탄광지구에 매년 2만 세대씩 4년간 대대적인 건설사업을 전개하고, 매년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발전정책을 지속하여 100개 시군의 발전토대를 갖추어 줄 것이라 했다.

4. 군사 분야: '복잡한 국제정세'와 '방위력 강화' 주장

김정은은 복잡한 국제정세에서 "예측 불가능성만을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서 "오늘의 편안함보다 최악의 상황을 염려하고, 단기 이익보다 장기·전략적 이익을 중시해 대비해야 예측불가능성을 예측가능성으로 전환시킬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후의 승리는 최강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불퇴로 다져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은 대외관계를 당장의 이익보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장기적 전략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미관계에서 협상보다 핵무력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대결구도 관리에 방점을 두겠다는 2019년의 대미 '장기대결전론'을 재생해 핵개발을 정당화했다. 김정은은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진화시키며 핵무력의 신속정확한 대응태세를 만반으로 갖추어 국가와 지역 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고, "인민 군대의 강군 현대화 로선과 새시대 국방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보장하여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장성 강화시킬것"이라고 주장했다.

5. 대외 분야: 대미·대남태도, 대외정책 기조 거론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 9차 당대회 때의 표현보다 미국에 대해서 '반미 적대' 의지가 늘어나 장기 대결전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선명해졌고,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적투쟁'을 강조하여 긴장분위기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핵·재래식 무기 병행 발전' 정책을 정당화했다. 김정은은 '핵보유'로 북한이 다른 지역(이란)보다 안전하다며 핵개발 노선을 정당화했다. 그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 국가 주변에 핵전략 자산들을 상시 끌어들이며 지역의 안전을 흔들고 있지만...우리 국가의 안전성은 지구상의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며...필요하면 위협을 줄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의 경제적 편익보다 중장기 안보 우려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핵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정은의 이번 연설에서는 당대회 '보고'에서 나타났던 '조건부 대화'나 '최강경 자세' 등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사라졌다. 대신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국가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여 "자주세력의 반미감정을 격발"하고 있다는 등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각하여 북한 주민들의 대미 적대감 고취에 비중을 두었다. 이처럼 김정은의 연설에 반미·적대 색조가 강화된 것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북한 주민들을 주요 청중으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핵개발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중동사태 이후 체제 보호 위기감이 증대된 점도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김정은은 "다극세계 건설은 더욱 힘있게 추동될 것"이라거나 "지난 시기 낡은 기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격과 국위에 상응한 외교전술을 구사해야 한다"고도 해 비서구권과의 외교관계 확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2025년 9월 김정은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 이래 베트남, 라오스 등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를 강화했고,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 대통령이 3월 25~26일 방북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에 대해서 김정은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했다. 당대회 때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을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김정은이 당대회에 이어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 '대적투쟁 강화'를

주창한 것은 600mm 방사포 전방배치와 해군작전능력 강화 등 '핵·상용무기 병행 발전' 추진을 위한 군사비 부담증가와 민생개선 유예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김정은은 또 종러관계 관련 "새 시대에 부합되게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진 나라들과의 국가 간 관계를 발전적 견지에서 계속 개선강화하며 동시에 중장기적, 전략적 국익보장의 원칙에서 국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외교적 우선권을 재조정, 재정의하고 책략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대중관계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국익과 자율성을 내세워 '속도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이번 북한 15기 최고인민회의 출범의 특징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권력구조 면에서는 김정은 친정체제를 강화했다. 국무위원에 다수의 당비서들을 직위 중복으로 배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조용원)과 내각 제1부총리(김덕훈)에 전임 당비서들을 전보함으로써 종래의 당지도부 구성원들을 권력기구 전반에 포진했다.

둘째, 정책 방향 면에서는 경제 활성화보다 국방력 강화와 '대적투쟁' 외교 강화를 예고했다. 당대회 '총화' 보고에 이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김정은은 새 5개년 경제계획에 대해서는 '정비보강 지속, 생산 활성화 도모'라는 기존 정책 연장선에서 두리뭉실 넘어갔다. 반면에 군사 분야에서는 "최우선 자원 보장으로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고, 대외 분야에서는 '반미·대남 대적투쟁' 의지를 드러내면서 대러밀착과 함께 반미 외교 강화를 시사해 공세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체제 관리 방식 면에서는 개혁개방 기조에서 더욱 후퇴해 사상우선·통제강화와 함께 자립노선 고수로 체제 관리의 경직성·폐쇄성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은 국정관리에서 '사상선행의 원칙'을 강조했고, 인민반·경찰 제도 등 사회통제 시스템 강화를 예고했다. 또 경제관리의 '내각책임제·중심제'를 주장하면서도 군수산업에 자원 우선 배분을 강조해 민생경제가 아닌 군수산업 진흥에 대한 내각의 책임을 주문하는 듯했다. 지난 정책의 최대 성과로 핵개발과 함께 '자력갱생 노선 고수'를 거론함으로써 '대외 경제협력 활성화'를 거론하기는 했으나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북한의 양대 정치행사에 드러난 김정은 유일지배 심화, 민생보다 군사우선, 사상통제 강화의 정책 기조는 외관상 북한에 안정되어 가는 '강성국가' 이미지를 굳히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주장한 대로 '복잡한 정세'하에서 "기본적으로 5개년 계획의 성공", "이민위천 구현 노력", "핵보유국 지위 불가역화", "동북아에서의 전략국가" 구실 덕분이며, 실제로도 집권 15년 만에 김정은의 '애송이', 북한의 '약체 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9기 노동당, 15기 최고인민회의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5년이 더 지나면 체제의 효율성이 극히 저하되고, 사회 저변의 민심이반과 권력층 내 정책 갈등은 극심해질 것이며 복잡한 국제정세의 이점도 줄어들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 내부의 개혁개방이 아닌 사상통제와 자력갱생 노선 고수, 민생개선 부진과 자원배분 암투 그리고 국제정세의 지정학적 혼란 정돈 가능성에 있다. 핵미사일 고도화의 한계효용 체감, 경제관리의 무정부성 심화, 노동당과 장마당의 갈등과 당·정·군 간의 갈등고조가 앞으로 5년 후, 김정은 집권 20년 차에 북한 내부의 지배적인 정세의 이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때가 되면 실정의 책임은 최고지도자에게 돌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당총비서와 국무위원장 추대 과정에서 모든 '성공한' 정책 결정의 정점에는 김정은이 있다고 선전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대미관계를 대화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핵능력 제고를 통해 '전략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대러 밀착과 함께 라오스·벨라루스 등 비서구권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의 진영외교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도 한미공조, 동북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 확대 외에 비서구권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이해관계 공유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한국에 대해 "동족 범주에서 완전 소거"를 주장하며 "완전 붕괴 가능성 불배제"를 선언한데 이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철저히 배척 무시하고, 건드리면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한 만큼 대남 단절·무시 이상의 위협·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남북 접촉면에서의 군사적 도발, 한국 사회 내부에 대한 심리전 강화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충돌 가능성 증대가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주장하는 '남부 국경선', 특히 '해상 국경선' 획정에 따라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 부근에서의 충돌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안보태세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북한이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는 '핵보유국' 덕 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론', 일종의 '패배의식' 유도를 위한 심리전을 극복하는 대북·안보 정책의 정립과 일관된 실천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대남조직이 외무성 내에 편제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공세적 '대적투쟁'을 위한 통일전선 외교가 예상되므로 대한민국의 권위·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

[별첨 1] 내각 총리의 '5개년 계획 성과' 보고(2026.3.23)

부분별	성과 내용
전반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를 낸 주요 지표: 전력, 압연강재, 석탄, 전기동, 전기아연, 천생산, 살림집 건설, 철도화물수송량 계획 주요 공업 부문 2020년 대비 주철 3.2배, 질소비료 1.5배, 유색금속 1.9배, 시멘트 1.4배, 수산물 1.9배 장성 * 박정근 부총리(국가계획위원장)는 토론에서 "5개년 계획이 기본적으로 완수되어 국내총생산액을 158배 장성시켰다"고 언급,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5개년 계획 기간에 그 이전 대비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가 24배로, 그중 핵심 부문에는 8 배이상 늘어났다"고 언급
금속공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철 생산체계의 기술적 완성을 통해 선철생산능력 더욱 조성,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강화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둠
화학공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대비 질소비료 생산량을 149% 장성시키는 등 의미있는 결실 마련
기계공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 공사 결속으로 대형공작기계 등 첨단기계설비들을 계열생산할 수 있는 토대 구축 금성뜨락도르공장은 능률 높은 농기계를 생산하도록 개건 현대화 등 중요기계공장들 생산능력 강화
전력공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차 당대회 제시 목표의 106% 수행, 어랑천3호발전소 및 고성군민발전소 등 새 동력기지 건설
석탄공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탄 막장당 생산성 제고 등 생산 안정화를 위한 투쟁 힘있게 벌임
건재공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전 대비 시멘트 생산 1.4배 장성, 석재와 유리 등 건재품 생산 증대
철도운수 부문, 채취공업 부문, 자원개발 부문, 임업 부문 등에서도 자립적 토대 강화	
인민생활 부문: 알곡생산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에 2020년 대비 많은 양의 알곡 증수 성과 알곡 생산구조 변경으로 밀 재배 면적이 늘어나 강냉이를 심어 정보당 2t도 못 내던 포전들에서 밀을 4~5t, 지어 8t 이상 소출, 농산 기계화 비중 제고와 관개 체계 완비로 안정적 농산 전망을 열어놓음
경공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생산 목표치 이상 수행, 평양양말공장·평양가죽이김공장 등 개건 평성점화일용품공장 새로 건설
지방발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여 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 건설로 기초식품, 식료품, 필수 소비품 생산 시범적 병원 및 종합봉사소 건설
지방경제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포시 바닷가양식사업소와 락원군 바닷가양식사업소 건설 강원도와 평남에 6개 수력발전소와 은산종이공장 건설 등 지방경제의 자립적 토대 강화
살림집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 시민 살림집 건설 문제 해결 및 전국 농촌지역 살림집 건설 등 전국적으로 36만 6900여 세대 살림집 건설, 인민생활 관련 2,100여 대상 건설·개건
유아학생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들에게 젓제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도마다 학생 교복과 신발을 전문 생산하는 공장 건설

[별첨 2] 새 '5개년 경제계획' 제시 부문별 과제

구분	최고인민회 내각 총리 보고 과제
경제건설 기본과업	• 8기 성과 공고화로 안정적·지속적 성장을 위한 발전 토대 구축, 인민생활 실제 개선 *김정은은 “앞으로 5년 기간에 공업 부문을 1.5배 장성시켜야 한다”고 언급
내각경제관리개선	• 경제관리 방법 결정적으로 개선, 지휘통제능력 강화, 경제전반 통일적·전망적 지도
금속공업 부문	• 기존 주체철 생산토대 활성화, 강철 질 제고, 강재 생산공정 증설, 원료·연료 보장
화학공업 부문	• 현존 생산능력 최대 발휘,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대상 공사 결속 등으로 화학부문 생산 목표 반드시 점령
전력공업 부문	• 노력·자재보장 대책 수립 • 수력발전소에 고효율 수차 설치, 송전계통 증설, 석탄소비 줄이고 효율 제고
석탄공업 부문	• 탐사 매장량 확보, 설비·자재 우선 보장, 탄광 심부 개발, 후방사업·노동보호 조건 개선 등 석탄증산 도모
기계공업 부문	•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현대화 경험을 토대로 중요 공장 현대화 실현, 채취설비와 농기계 개발 사업 적극 추진
채취공업	• 유색금속생산 증대, 광산·제련소·공장 생산 정상화
림업 부문	• 통나무 생산과 산림조성 조화, 목재가공품 생산 증대
철도운수	• 수송조직과 지휘 개선, 철길 안정성 및 수송능력 제고
륙해운	• 수송능력 제고, 현대화, 화물자동차 수송능력 확대
건설 부문	• 수도 건설, 살림집, 국토건설대상 완공, 안전 보장
건재공업	• 시멘트 생산공정 보강, 마감건재 국산화·다양화
정보산업	• 방송·우편통신 현대화, 국가업무 정보화, 통합조정
국토환경	• 산림복구 및 개조사업, 고속도로 상태 개선
도시경영	• 살림집·공공건물 정비, 도시 도로 포장, 생활용수 개선
재해방지	• 위기대응능력 제고, 기상수문사업 현대화, 방역 강화
에너지 문제 해결, 관광지구 건설, 대외경제활동 적극화	
인민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환경 마련 위한 사업 강화	
식량 문제	• 농사에 총력 집중,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고 생산된 알곡을 빠짐없이 장악해 규정대로 양곡소비
축산과수	• 생산목표 점령, 선진 남새기술 전수, 수산물 증산
경공업	• 질개선과 새 제품 개발, 인민소비품 증산 • 신설 지방공업공장의 원료기지·기능공 보장, 정상화
복지시책	• 어린이에게 유제품·영양식품 공급, 학생 교복 등 생산
상업봉사	• 사회주의 상업 본태 살리고, 봉사 부문 개선

저자

한기범 박사는 국가정보원에서 20여년 북한 분석관으로 활동하다가 2009년 2월 3차장(북한 업무 총괄)을 끝으로 퇴임했다. 퇴임 후 고려대 초빙교수,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3년 4월 ~ 2016년 2월 국정원 1차장(북한 및 해외 업무 총괄)을 다시 맡았다. 이후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에 이어 북한연구소에서 석좌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24년 1월부터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도 활동을 시작했다.

서보배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고, 연구 관심분야는 북한 인권, 북한 체제, 남북관계 등이다.

-
- ¹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었다,” 『노동신문』 (2026.3.24).
 - 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함에 대하여,” 『노동신문』 (2026.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준비사업 추진,” 『조선중앙통신』 (2026.3.11); “각지 선거구들에서 등록된 대의원후보자와 선거자들 사이의 상봉모임 진행,” 『노동신문』 (2026.3.12).
 - ³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개회사에서 687명의 대의원 중 “총련에서 사업화는 대의원 5명과 건강상 관계로 대의원 6명이 참가하지 못해” 676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개회사,” 『노동신문』 (2026.3.23).
 - ⁴ 김정은은 13기와는 달리 14기 선거에 대의원으로 나서지 않았다. 북한은 2019년 8월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직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김정은의 대의원 불출마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했다.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지위를 일개 대의원의 일원이 아니라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존재로 격상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 ⁵ 김여정이 14기에 이어 대의원에 선거되었고, 관변 야당인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으로 이동한 대남일꾼 리선권과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도 대의원 명단에 들어갔으며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당 국제비서도 14기 때에 이어 대의원직을 유지했다.
 - ⁶ 통일부는 3월 17일 최고인민회의 15기 대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선자 687명 중에 약 520명이 새 인물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9기 대의원 선거 때부터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해 왔는데, 지난 11~14기 선거에서 인사 변동 폭이 4~50%대인 것과 비교하면 이번 교체는 역대 최고치이다.

-
- 통일부는 이번 선거가 2년 지연된 것도 대대적 교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대 교체 기조에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 간부들의 패배주의, 보신주의를 비판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⁷ 김정은은 내각 성원들에게 “내각 사업이자 당중앙위원회 사업이고, 당결정집행이자 내각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새 전망계획 기간에 당 정책을 관철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 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1일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6.3.23).
- ⁹ 북한은 2025년 12월 26~2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헌법 4장 58조에 명기했다.
- ¹⁰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즐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6.2.26).
- ¹¹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한 토론: 새 5개년 계획기간 나라의 경제작전국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박정근대의원,” 『노동신문』 (2026.3.24).
- ¹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 제기한 국가예산보고,” 『노동신문』 (2026.3.24).
- ¹³ 최지영,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분석(1): 경제 부문,” 통일연구원 『KINU Online Series』, CO26-18 (2026.03.26).